News 기관 · 단체 소식

농림부

우리나라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회복 선언

농림부는 작년 11월말부터 금년 3월초까지 발생한 AI(7건)가 성공적으로 박멸되고,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조건을 충족시켰으므로 다시 AI 청정국이 되었다고 2007년 6월 18일 선언했다.

국내에서 마지막 발생지역(천안)의 살처분 등 방역조치 완료(3월 17일) 이후 3개월이 경과됐고, AI 주요 전파 원인인 오리에 대한 전국적인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지난 6월 18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 및 관련기관 연석회의에서 지역주민 등 축산농가와 군경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AI가 성공적으로 박멸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림부는 우리나라가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음을 OIE에 통보하고, 일본 등 우리나라산 닭고기 수입국가에 대해 AI 발생이후 취하고 있는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림부는 AI 방역추진 과정에서 파악된 일부 미비점(방역조치 대상 가축 · 시설물의 범위, 야생조류에서 발생시 방역요령 등)을 기존 방역실시요령 및 SOP 등에 개정 반영하여 AI 대응체계를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 · 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보완대책(안) 발표

한 · 미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 생산 감소 금액의 85%를 현금으로 메워 주기로 했다. 또 폐업하는 농어민에게는 5년간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고, 이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1년간 월 30만원에서 6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6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 · 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보완대책(안)을 발표했다.

농림부는 한 · 칠레 FTA 이후 키위, 시설포도 등 대상품목을 사전 지정해 피해보전직불제를 시행해 왔지만 앞으로는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을 사후 지정해 실제 피해를 보는 품목에 지원이 되도록 연계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득보전 비율은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된다.

또 농협이 직접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농업전문 사모펀드(PEF)도 결성한다. 당장 올해부터 농림부, 농협,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해 300억원 규모의 PEF를 구성한 뒤 유망한 벤처농업인에게 직접 투자하고, 장기적으로는 PEF를 활용한 창투사를 세워 농업전문투자펀드를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닭 · 오리의 경우 사육단계의 위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를 도입하고,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전체 도축작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닭 · 오리 분야 보완대책〉

- 사육단계 HACCP 도입(2008)으로 국산 가금육의 신뢰도 제고
- 닭 · 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를 전체 도축작업장으로 확대(2009) 하고 작업장 명칭을 표시해 수입육과 구분 유도

- 종계 유통관리 방법을 개선하여 우량 종계 유통질서 확립
  - 종란과 병아리 혈통인증서 발급 의무화 및 종계장 · 부화장 점검 강화
- 육계 우수브랜드 인증 및 닭 계열화 업체 사육비율 확대
  * 계열화 사육비율 : (2006)72% → (2013)79% → (2017)83%
- 삼계탕 등 멸균제품을 수출 품목으로 집중 육성

■ 축산물 위생 · 안전성 강화대책 발표

농림부는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축산물 위생 · 안전성 대책'을 대폭 강화해서 시행한다.

최근 축산용 항생제 오남용, 조제분유에서 이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검출, 중국산 불량 갈비탕 유통, 집단식중독 발생 등으로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2007. 9. 28 시행)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 도입,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2007. 3. 28 시행)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인증제도 도입, '농지법' 개정(2007. 7. 4 시행)으로 농지내 축사 진입허용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친환경축산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농림부는 금번 대책 중 HACCP 적용 확대 등의 대책은 정해진 일정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조제분유의 병원성미생물 및 이물질 검사 강화는 금년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 · 미 FTA 협상 등 개방화 시대에 우리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 여부가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신뢰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축산물 위해요소 제거에 정책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정책' 108P 참조).

■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시 요령과 긴급행동지침(SOP)이 개정되는 등 AI 대응체계가 재정비된다.

농림부는 지난 6월 1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7월말까지 시 · 도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입안예고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말까지 AI 방역실시 요령 고시와 SOP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강제폐기 대상 가축의 범위 및 이동제한 기간 등 재정비' '장기간 이동제한 기간 동안의 가축생산물에 대한 처리방안 명문화' '야생조류에서 AI 발생시 방역요령 신설' 등이다.

협의회를 주재한 김달중 농림부 차관보는 "지난 겨울 AI 발생은 7건으로, 2003년 19건에 비해 현격히 줄었다"며 "이는 신속한 농가신고와 위험지역내 강제폐기 등 차단방역을 통해 확산을 막아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무창계사에서 발생한 사례를 볼 때 발생농가의 차단방역은 아직 미흡하다"며 "AI에 대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 대응 개선대책으로는 'AI 발생시 시 · 군의 신속한 초동방역 지원' 'AI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제제 강화' '강제폐기 참여인력 등에 대한 예방접종' '동물복지 환경단체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 등을 내놓았다.

■ 민간보험사 가축공제 상품 시판

가축공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보험사(LIG 컨소시엄)의 가축공제(보험) 상품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판됐다.

민간 보험사의 전문판매점을 통해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소 · 돼지 · 닭 · 오리 · 말에 대한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지원 비율은 축발기금보조 50%, 가입자 부담 50%이며, 축사특약은 축발기금보조 30%, 가입자 부담 70%이다.

앞으로 축산농가는 다양한 가축공제 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는 상품을 취사 · 선택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가동되면서 농가 가입유도를 위한 업체별 경쟁으로 대농가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림부는 가축공제에 민간보험사 참여 외에도 농가가 각종 사고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망 확충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02-6900-3242 LIG컨소시엄 법인경영개발팀
02-6900-3533 LIG컨소시엄 법인영업팀

〈표〉 LIG 컨소시엄 2007년 가축공제 사업내용

구분	소			돼지	가금	말	축사(특약)
	송아지	큰소	종모우				
가입대상	생후 2~12개월 미만	한(육)우 12개월~13세 미만 (젖소는 8세 미만)	종모우	제한 없음	닭 오리	종마 경주마 일반마 (육성마)	가축사육건물 및 부속건물 (시설 포함)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포괄가입	개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공제료의 50%						공제료의 30%

■ '농산어촌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실시

농림부, 해양수산부, 문화광광부 등 농림어업관련기관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농산어촌에서 휴가보내기-자연으로 떠나는 맛있는 휴가'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산어촌으로 유도하고 한 · 미 FTA 등 갖은 어려움에도 꿋꿋이 농산어촌을 지키고 계신 분들께 큰 희망과 힘을 주기 위한 것이다.

휴가철 동안 가볼 만한 농산어촌 마을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만들어 고속도로 톨게이트, 여성잡지, 행사 등을 통해 10만여 부를 제작 · 배포한다.

농림부, 해양수산부, 문화관광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작한 '자연으로 떠나는 맛있는 휴가' 책자는 전국의 우수 체험마을 150곳을 선정해 자세한 안내를 수록했다. 테마를 들 · 산 · 바다로 잡아서 국민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각각의 농산어촌에서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부록으로 문화관광부가 심사, 선정한 각 지역 우수축제 52곳과 광역자치단체별로 찾아갈 수 있는 체험마을 지도, 서해안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노선별로 지도를 부록으로 수록, 연중 쉽게 농산어촌을 찾아갈 수 있는 가이드북으로 활용하도록 제작됐다.

책자에 소개된 내용은 휴가 캠페인 참여 부처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브랜드 카페(http://cafe.naver.com/07summer)에서 전자책으로 다시 확인 가능하다.

산업자원부

7월 1일부터 식육판매점 '근' 단위 사용 금지

산업자원부는 7월 1일부터 '평'이나 '근' 등 비(非)법정단위를 계약서나 광고, 상품 등에 사용하는 기업이나 업소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등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매매계약서와 입주자 공고문 등에 평(1평=3.305㎡) 대신 ㎡만 쓸 수 있게 된다.

또 금(金) 가격을 고시할 때 g단위만 쓰게 했고, 거래할 때도 돈(1돈=3.75g) 대신 2g, 4g 등 짝수 정수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식당에선 '인분(人分)'이 아니라 100g을 기준으로 하는 가격 표시제를 쓰도록 할 방침이다. 메뉴판에서 '인분'이 없어지면 "삼겹살 3인분 주세요"라는 식의 표현도 점차 사라질 전망이다.

골프장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인 '야드'는 국제관례를 감안해 당분간 미터(m)와 함께 쓸 수 있게 했지만, 신설 골프장은 미터법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볼링장에서 쓰는 '파운드'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정부가 계량단위 정비에 적극 나선 것은 1961년 계량법에서 국제단위계(미터법)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하고 다른 단위 사용을 금지한 지 45년이 지났지만 실생활에서 여전히 여러 단위가 함께 쓰여 혼란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품을 사고 팔 때 흔히 쓰는 '근'만 해도 1근이 쇠고기는 600g이지만 채소는 400g이다. 토지나 건물은 약 3.3㎡가 1평이지만 유리는 0.09㎡가 1평이다.

'마지기'는 지역에 따라 달라 경기지역에서는 1마지기가 495㎡이지만 충청지역에서는 660㎡, 강원지역은 990㎡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비법정 단위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사용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악질 '식파라치' 포상금 안준다

포상금을 노린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면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식품당국이 일부 식파라치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식파라치'란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람을 전문적으로 신고해 포상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정 ·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을 이처럼 개정해 최근 입안예고했다고 지난 6월 4일 밝혔다.

운영지침이 시행에 들어가면 의도적으로 영업주로 하여금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장한 뒤 위반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 포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법 판결이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끝난 뒤에 지급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시기와 방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실제로 부정식품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뒤 각 시 · 군 · 구 등 지자체들은 포상금을 타 낼 목적으로 마을 아이들을 시켜 술 등을 사오도록 시킨 뒤 이 장면을 고스란히 카메라에 담아 신고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이에 따라 주민들간의 불신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에 시달렸었다.

식약청 식품관리팀 관계자는 "최근 부정 · 불량식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던 게 사실"이라며 운영지침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일본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 방한

일본 조류인플루엔자 전문가들이 지난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우리나라를 방문해 2006~2007년 겨울 한일 양국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관한 발생원인과 전파경로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

돗토리 대학의 이토 도시히로 교수를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농림수산성 공무원 및 야생조류 전문가 등 총 5명으로 구성됐으며, 주한일본대사관의 마쯔모토 류헤이 농무담당 참사관이 동행했다.

일본 방문단은 2007년 1월, 미야자키현의 HPAI 발생지역에서 약 70㎞ 거리에 있는 구마모토현의 야생조류에서 H5N1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본의 HPAI 발생도 야생조류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에서는 금번 일본 HPAI 전문가 방한이 한일 양국의 HPAI를 비롯한 주요 가축전염병 공동 대응방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 관계자들은 그간 추진해온 상호협력협정서(MOU)의 체결, 공동연구수행, 역학조사 내용의 분석에 대한 공동 학술발표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여름철 위생관리를 위한 식육가공 및 알가공 분야 간담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12일 서울 구로동 소재 CJ 식품안전센터에서 식육가공 · 알가공업체, 소비자단체 및 관련협회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하절기에 일어나기 쉬운 식중독 등 축산물안전사고 예방,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의 개정 방향을 설명하여 소비자와 관련업계의 관심과 이해를 높혔다.

아울러 알가공업체는 액란의 보존 및 유통온도 기준 완화를 건의했으며, 소비자단체는 수입축산물 안전관리 및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위생감시활동 강화를 요구했다.

검역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협의되는 사항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위생감시에 활용하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반영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판매업 · 식육포장처리업에 관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절기 축산물 특별 위생 점검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에 소비가 많이 되고 변질되기 쉬운 축산물(아이스크림, 양념육 등)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24일까지(8주간) 아이스크림 등 하절기 변질우려 축산물 취급영업소(유가공업소 · 우유류판매업소 · 식육가공업소 ·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해 시 · 도 및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특별단속으로, 무허가 · 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의 적정성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여부, 원재료 사용의 적합성,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하게 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생산 · 유통 · 판매될 수 있도록 축산물 영업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07년 2/4분기 가축전염병중앙예찰협의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22일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농림부, 시 · 도, 시 · 도 가축방역기관, 축산관련단체 관계자 등과 검역원 방역관련 담당 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2/4분기 가축전염병 중앙예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찰협의회에서는 최근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동향과 아울러 향후 예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성과, 국내 소부루세라병 등 현안질병의 발생현황 및 전망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됐다.

특히 올 여름철에는 소 · 모기매개성질병의 면역수준이 낮아 이러한 질병의 발생증가 우려가 있고, 폭염 · 수해 등으로 인한 하절기 질병의 발생 예측 및 예방대책에 대한 자료 등 현장방역에 필요한 기술정보가 교류됐다.

한편 동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인 방역과(과장 이오수)에서는 예찰협의회 운영을 기존 방식에서 탈피, 일선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안질병 위주 집중분석협의로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토론 중심으로 회의방식을 개선하여 운영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6~2007년도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전북 · 충남지역에서 긴급 방역업무 수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방안 등 현장 사례발표와 이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축산과학원

기관명칭 변경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지난 6월 13일 수원청사에서 농촌진흥청장과 축산관련 인사 및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명칭을 축산연구소에서 축산과학원으로 바꾸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축산과학원(NIAS :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약칭 : 축산원)은 그동안 농촌진흥청 축산연구소와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축산관련기관(축산기술연구소 등)의 명칭이 유사하여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고, 미래 성장 동력산업인 바이오장기 생산 및 신약개발 등 첨단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국가연구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기관명칭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월 4일 대통령령에 의거 기관명칭을 변경하게 된 것이다.

'축산과학원'은 1952년 중앙축산기술원으로 출발, 1994년 축산시험장과 국립종축원이 통합, '축산기술연구소'로 개편 후 2001년 책임연구기관으로 전환됐으며, 2004년 축산연구소로 개편 후 이번에 '축산과학원'으로 명칭이 변경, 우리나라 '과학기술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가 유일의 축산관련 연구개발(R&D)기관이다.

이상진 원장은 현판식에서 축산과학원의 목표를 '고객에게 환영받는 과학원' '창의와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과학원'으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연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전제하고, 명칭변경에 걸맞게 무한경쟁시대에 국내 · 외 변화를 주도하며 세계적인 과학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 1사1촌 마을 장마 및 혹서기 대비 양축 현장 기술지원

축산과학원은 지난 6월 14일 1사1촌 자매마을인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내리마을을 방문해 '장마철 및 혹서기 대비 양축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했다.

곧 다가올 장마와 혹서기를 대비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현장기술지원에서는 '장마 및 고온기 대비 가축사양관리 요령' '고급육 생산을 위한 농가 맞춤형 컨설팅' '양축농가 위생관리 및 방역지원' 등이 이뤄졌다.

노윤우 내리마을 이장은 "1사1촌 자매의 연을 맺은 후 필요한 시기마다 잊지 않고 마을을 찾아와 기술교육과 지원을 해 주시는 축산과학원 직원들에게 마을을 대표해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축산과학원은 양평 내리마을과 2005년 2월 18일 1사1촌 자매의 연을 맺은 후 혹한기 · 혹서기 대비 가축방역, 농가 컨설팅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농한기에 마을 주민들을 축산연구현장에 초청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돈독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고 있다.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우리나라 안전축산물전' 개최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원장 김연화) 주최로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대서양홀 제5전시관에서 '우리 축산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약속'이란 슬로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농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외국산 축산물의 범람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우리나라 안전축산물전(Good of Korea Livestock Products)'이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축산물 정보를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체류형 공간으로 준비해 (주)하림, (주)체리부로, 농협목우촌, 횡성한우 등 축산관련 20여개 업체가 참가, 축산물별 정보 제공과 해당 브랜드를 알리는 홍보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우리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정책 및 일상에서 축산물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제관도 마련됐다.

부대행사로는 '건강한 축산물 급식식단 요리대회' '아빠와 함께 하는 축산물 요리대회' 등 테마가 있는 축산물요리경진대회가 열렸으며, 이를 통해 일반인이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 고기를 이용한 요리가 선보였다. 한편, '소비자교실' '토종닭 전시' '축산물 시식행사' 등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됐다.